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2017. 1.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주요 내용	4
1.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5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5
(2)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7
(3)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9
(4)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11
(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12
2.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13
IV. 향후 계획	15

I. 추진 배경

- 가계부채 증가*, 노후자산 부족** 등 사회·경제 문제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금융이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지속 제기

* '16.9월말 현재 가계대출은 1,228조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11.5% 증가
** 가구주 未은퇴 가구 중 56.6%가 노후대비가 안 되었다고 답변(통계청, '16년)

-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13년), 금융교육 강화방안('15년) 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금융교육 추진 중

①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3.9월)

- 범정부적 차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금융이해력 조사, 금융교육 실태평가, 감사인증제, 금융교육협의회 개편 등)

② 금융교육 강화 방안 주요내용 ('15.10월)

- 소비자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1사1교, 재미있는 교육, 감사역량 강화, 인터넷·모바일 교육, 민관협력 강화 등)

- 그 결과, 금융교육의 기회가 증가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

* 수도권外 지역 교육실적(인원수) : ('14년) 43.9% → ('15년) 49.8%, 5.9%p ↑

- 다만, 연령대별 금융이벤트가 상이하나, 초·중·고교생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부족하며,

* 금융교육 대상자의 약 65%가 초·중·고교 학생

- 금융이해도가 낮아 금융부채·금융사기 위험이 높거나, 新금융서비스 활용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별교육도 필요

☞ '신용관리·노후대비 교육'과 '금융소외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을 마련

II.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소비 환경 변화

- ① [가계부채 증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 가계대출(조원): ('13년) 961 ('14년) 1,025 ('15년) 1,139, ('16.3Q) 1,228

- 개인의 신용등급은 카드발급·대출금리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합리적 금융이용을 위해 신용관리 역량이 필수적

* 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1~2등급 3~4%대, 3~4등급은 3~6%대, 5~6등급은 4~8%대, 7~8등급은 6~10%대로 증가 (은행연)

- 가계부채 증가, 금리인상 기조 등에 따라 대출금 및 이자 상환부담 증가시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 ② [고령화 사회심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대비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

* '2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 예상

- 연금 등 노후대비 제도 확대에도 계획적인 노후준비나 노년층 재무관리 역량등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파악*

* 노년층은 연령증가에 따라 대출수요는 감소하나 연체발생률이 65세 이후 급격히 증가(68세 0.8%→84세 1.3%) (신용정보원, '16년)

- ③ [新금융서비스] 새로운 전자금융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핀테크 디바이드'도 심화

- 고령자·다문화가족·장애인 등은 새로운 서비스의 이해부족으로 각종 혜택(우대금리, 수수료 등)에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향

* (예) 모바일뱅킹 가입자 연령대별 비중(한국은행, '15년)
(10대) 3.2%, (20~30대) 56.6%, (40~50대) 34.5%, (60대이상) 5.7%

2. 금융소비자 교육의 현 주소 (금융이해력조사결과('16년) 참고)

① [생애주기별 분석]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5세 이상의 금융 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맞춤형 교육 확대 필요

* 금융이해력(점): (18~29세) 62.0, (30~49세) 69.9, (50~64세) 67.3, (65세이상) 58.6

○ 20대는 채무연체율*이 높아 신용도 하락 위험에 취약한 바, 높은 금리부담 및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다중채무자(학자금대출 외 2건이상)의 연체율은 25세 전후 6% 내외로 증가, 25세이하 신용카드 이용자의 연체율은 5% 정도로 높은 수준(신용정보원, '16년)

○ 65세 이상은 노후대비 자산 관리*,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전자금융사기** 등 관련 교육 기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

* '14년기준 퇴연령층(66세이상)의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중은 49.6%로 OECD 국가(평균 12.4%) 중 가장 높은 수준(OECD)

** 지능화된 금융사기에 신속 대응이 곤란해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금감원, '15년)

② [수요자특성별 분석] 취약계층(다문화, 새터민, 저소득층 등)의 금융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특화된 교육 필요

○ 금융이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은 채무증가, 금융사기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맞춤형 금융교육이 요구되는 상황

※ OECD등도 노인, 이민자, 저소득층, 여성,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융교육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권고(금융교육 국가전략 가이드, '12년)

Ⅲ. 주요 내용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기본 방향

추진전략

금융소비환경 변화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강화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신용관리 신용하락 高위험 그룹 신용교육 강화

노후대비 노후대비 재무상담 서비스 활성화

청소년·대학생 체험형·생활밀착형 금융교육 확대

금융소외자 맞춤형 교재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新금융서비스 핀테크 활용 역량 제고

+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추진체계 금융교육협의회 중심 컨트롤타워 체계화

인력양성 금융교육전문가 양성 활성화

네트워크 금융교육센터를 통한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1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높은 그룹을 선별* 신용교육 실시

* Big data 분석자료 등을 이용하여 교육 대상을 정밀하게 타겟팅

◆ 대출상담사 교육으로 대출시부터 채무불이행 요인 감소 유도

① 정책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신용관리 교육 강화

○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일부에게 실시중인 신용·채무관리 교육 이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미소금융, 햇살론, 바깥드림론 이용자

※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교육 현황 (서민금융진흥원)

- (교육대상) 미소금융(창업자금, 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자), 햇살론(청년햇살론 대출자)
- (교육내용) 신용관리, 연체금 관리, 재무관리 등

-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되, 만족도 조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보완

②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신용카드 이용 교육 실시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대폭 확대

* 25세이하가 신용카드 연체발생률(2% 이상)이 가장 높음(신용정보원, '16년)

- 현금서비스·카드론 과다사용과 대출금 연체등의 위험을 알리고, 신용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콘텐츠 개발

③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에 대한 신용교육 제공

○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 제도·신용관리 등 교육 실시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장기 대출연체자들에 대하여 분할상환, 손해금 감면, 취업연계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

- 그간의 채무조정자 대상 교육 콘텐츠 및 교육사례 등을 토대로 청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채무조정자 대상 교육 현황(신용회복위원회)

- (교육대상)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대상자
- (교육내용) 신용관리 및 재무교육, 채무조정확정 내용 및 사금융피해 예방 등
- (교육방법) 방문교육 및 사이버 교육

④ 대출상담사 대상 신용관리 교육 실시

○ 대출상담사가 소비자의 적정 대출금액 결정, 신용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용관리 교육 실시

- 대출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정기 교육*(年1회)에 채무관리, 신용관리 등 신용 교육 과목을 추가**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상담사는 연1회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필수 교육 과목으로 반영 추진(금감원)

⑤ 빅데이터 활용 교육대상 타겟팅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소비자 특성 자료 등을 활용, 신용도 하락 위험이 높은 대상에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분석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16.5월)하고, 금융소비자 특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

[2]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 ◆ 노후재산 진단, 재무설계 등 개인의 노후 준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 노후행복설계센터의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
- ◆ 연금포털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 및 상담 기능 강화

[1] 노후대비 교육 · 상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인연금법」 제정('16.12월 입법예고 완료)을 통해 노후대비 교육 ·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 국가가 노후준비 지원, 연금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후재산 현황 진단, 재무상담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17)
-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 기관의 다양한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노후대비 자산의 안정적 축적 지원

[2] 노후행복설계센터의 교육 · 상담기능 강화

- 현재 1:1상담 위주로 운영중인 노후행복설계센터의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심화 상담 기능을 강화
- 은퇴설계상담사 교육컨텐츠 개발, 상담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활성화
 - * (예) 주요 상담사례의 교재화, 교육을 통한 기본지식을 토대로 심화상담 등

※ 노후행복설계센터 ('15.10월 개소)

- (목적) 노후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자문서비스를 제공
- (운영체계) 전국 약 50개소의 센터(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등) 운영 중
 - * 서민금융진흥원('16년은 신복위)의 사무국이 총괄, 상담사 교육, 교재개발 등 추진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교육의 내용과 교육 방법을 내실있게 운영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연금사업자 위탁 가능)가 연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32②)
 - ※ (예시) 교육 후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방식, 교재개발 등 개선사항을 상세 교육계획에 반영

[4] 연금포털을 활용한 노후대비 교육 및 상담

- '통합연금포털'등 연금포털 정보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자산진단 및 재무설계 지원 활성화
 - 공·사연금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하여 노후대비 필요자금 및 자산상태 등을 온라인으로 진단받고,
 - 개인의 동의하에 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후부족자금 안내서(green envelope) 발송 및 재무상담 서비스제공 등 확대*
 - * 관련 법령(노후준비지원법령) 개정 및 시범 사업을 거쳐 추진

※ 연금포털 활용 맞춤형 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예시



[3]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 ◆ 금융관련 내용의 교과반영을 확대하여 학교에서부터 충실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 '1사1교'등을 활용한 체험형·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흥미롭고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
- ◆ 대학교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실용금융 강좌를 확대하고, 교내 금융회사 지점이 금융동아리 및 신입생 OT 등 교육 지원

① 금융관련 내용의 교과 반영 확대 추진

-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금융관련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지속
- * 금융위·금감원과 교육부간 협의를 통해 '18년부터 적용될 교육과정에 금융 교육 내용을 확대 반영키로 하였으며, 현재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 집필 중

※ 2015 개정 교육과정('18년 고1부터 순차 적용) 중 금융관련 주요내용

- 통합사회 : (신규) 생애 금융 설계, 자산관리 원칙 등 포함
- 기술·가정 : (기존) 소비생활 등 → (개편) 재무 설계 관련 내용 추가
- 실용경제 : (기존) 자기 책임 원칙, 신용 관리, 예금자 보호 제도 등
→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연금 관련 내용 추가
- 경제수학 : (신규) 연금, 이자율, 소득, 할인율 등 포함

- 중장기적으로 금융관련 내용의 타 교과목 연계* 확대 또는 독립교과 신설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국·영·수 등 필수 교과목과 금융관련 내용을 접목하여 학생들의 이해 제고
(예: 이자율 계산을 통한 미래연금소득 계산)

② 실용금융 강좌 등을 통한 대학생 금융역량 강화

- 실용금융 강좌 개설 대학을 확대하되, 생활밀착형 금융지식 중심*으로 교재를 보완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 * 금융상품, 신용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을 강의평가 및 최신 금융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재검토
- ** 금융유관기관 및 금융체험관 방문, 금융기관 임직원 특강 등

※ 대학 실용금융 강좌 현황 (금감원)

- (교육내용) 금융상품, 부채·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 (교육현황) '16년 1학기 22개 대학(28강좌)/ 2학기 47개 대학(48강좌)
- (강사)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감원 부국장급 이상 직원이 출강
- (교재) 금감원이 마련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책자 무료 제공

③ 1사1교, 교내 지점 등을 통한 체험형 특별활동 확대

- 1사1교*, 대학교 교내지점 등으로 연계된 금융사를 활용하여 방과 후 교실·일일특강 등 교육을 활성화
- *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초·중·고교의 46%, 5천여개)
- 초·중·고교 학생들은 투자체험, 보드게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강의 등 체험형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프로그램 예시

- 체험관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모의투자교육 등 체험학습을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투자자교육협회)
- 모의투자교육을 토대로 희망 학생에게 실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실질적 체험교육 도입 검토 (금융회사)

- 교내 금융사 지점의 대학 금융동아리 지원, 신입생 OT에서 금융교육 등 추진

[4]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 ◆ 고용복지+센터에 금융교육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취약 계층의 금융상담 및 교육의 접근성 강화
- ◆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교육 추진

① 고용복지+센터 대상 교육

- 고용복지+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점점으로 활용

※ 고용복지+센터 ('14년 ~)

- 지자체를 단위로 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② 맞춤형 교재를 개발·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의 물리적·언어적 애로를 고려하여, 맞춤형 교재* 개발 지속
 - * (예) 시각장애인 전용 오디오북, 필리핀어 교재 등
- 금융교육기관과 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간·이동의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교육 추진
 - * 장애인복지관협회(장애인),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하나원(새터민) 등 개별 복지시설 관련 부처·기관에 대해 금융교육 홍보 후 협업 추진

[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 ◆ '핀테크 디바이드' 현상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등을 강화
- ◆ 전자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 교육 확대
- ◆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홍보 강화

① 핀테크 역량 격차 축소를 위한 교육 확대

- 금융취약계층(고령자 등) 대상 교육시 핀테크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맞춤형 교재에도 관련 콘텐츠 반영
 -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 * 모바일 지급결제,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자산관리 시스템 등 개발업체
-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핀테크 취약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발자 교육 신설
 - * (예)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 조사(금융위, '17년 上) 추진 예정

② 전자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 강화
 - * 범금융권, 대한노인회, 취업포털,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 배포 및 교육을 실시 중

③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이용방법 교육

-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의 홍보·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효용성 제고
 - * 자동이체통합관리사이트(Pay Info), 계좌정보통합관리사이트(Account Info) 등

2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 ◆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금융교육의 효율성 제고
- ◆ 금융교육 관련 인력,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조정·보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1 (추진체계)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16.8월 입법예고 완료)을 통해 '금융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법제화
 - * 금융위(의장: 부위원장), 기재부·교육부·행자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금융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
- 교육·복지·노동·여성 등 타 분야 정책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금융교육 추진
-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에서 교육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을 통해 금융교육의 질 제고
 - *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실무 지원
- 업권별 특화된 분야를 고려하여 주력 교육대상 및 내용을 분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관별 금융교육 현황을 점검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범 금융권 금융교육 협력단 ('15.12월~)

-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70여개의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1사1교 프로그램' 등 금융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협력하는 네트워크

2 (인력양성)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 등 교육역량 강화

-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교육 스타강사 육성 등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
 - * 전문강사 양성연수 수료, 교육 경력, 교수법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강사에 인증을 부여 (금감원, '15.9월 도입)
 - ** (예)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금융유관기관에서 전담강사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에 활용
- 초·중·고교 교사연수 및 예비교사 교육 등 기회를 활용하여, 체험형 교육방식 등을 안내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을 유도

3 (네트워크) 금융교육 관련 홈페이지 통합

-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일원화하여, 교육자료·교육일정 등을 통합·게시
 - 금융교육 수요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 (Peer Review) 기관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공유

-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 금융 교육의 질적 평가를 위해, 기관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홍보 및 공유
 - 차기 '금융교육협의회'('17.하반기)에서 기관별 이행상황 발표 추진

IV. 향후 계획

실천 과제	담당기관	일정
1.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①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신용관리교육 대상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17~'18년 (단계적)
○ 신용관리교육 콘텐츠 보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기관	'17년중
②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신용카드 이용교육 확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계속
③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교육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17.上
④ 대출상담사 신용교육 실시		
○ 대출상담사 대상 신용관리 교육 확대	금융교육기관 (협회 포함)	계속
○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 검토	금융감독원	'17.下
⑤ 빅데이터 활용 교육대상 타겟팅	신용정보원 등	'17년~
(2)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① 「개인연금법」 제정	금융위원회	'17년중
② 노후행복설계센터 교육·상담 기능 강화	서민금융진흥원	'17년~
③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회사	계속
④ 연금포털 활용 노후대비 교육 및 상담 활성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17년~
(3)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강화		
① 금융관련 내용의 교과반영 확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관련 내용 반영	교육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17년
○ 타교과 연계 확대 또는 독립교과 신설 등 연구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	'18.上
② 실용금융 강좌 개설 대학 확대	금융감독원	계속
③ 체험형 특별활동 확대		
○ '1사1교' 지속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계속
○ 대학 내 입주 금융회사 지점과 대학 간 연계	금융관련협회, 금융회사	계속
○ 체험형 중심으로 교육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선	금융교육기관	계속

실천 과제	담당기관	일정
(4)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① 고용복지+센터 대상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17년~
② 맞춤형 교재 개발·활용		
○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등 대상 맞춤형 교재 개발	금융감독원	계속
○ 금융교육기관·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	금융감독원, 투자자교육협의회	'17.下
(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① 핀테크 역량 축소를 위한 교육 확대		
○ 취약계층 교육컨텐츠에 핀테크 교육 포함	금융교육기관	'17.上
○ 핀테크 업체-금융교육기관 MOU 체결	금융교육기관 (협회 포함)	'17.下
② 금융회사 직원 대상 핀테크 교육 신설	금융교육기관 (협회 포함)	'18.1분기
③ 온라인 서비스 홍보·교육 확대	금융교육기관 (협회 포함)	계속
2. 금융교육 인프라 확충		
①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금융위원회	'17.1분기
○ '금융교육협력단'의 금융교육 현황 점검 (기관별 주력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분장)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기관	'17.上
② 금융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		
○ '금융교육 전문가 인종제도' 내실화	금융감독원	'17.上
○ 교사연수 및 예비교사 교육시 체험형 교육방식 안내	금융교육기관	계속
③ 금융교육 관련 홈페이지 통합	금융감독원 등	'18.上
④ 금융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공유	금융위원회, 금융교육기관	'17.3분기